

“경악”·“공포”... “집 밖 나가기 무섭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지역민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45년만에 내려진 계엄령 선포 소식에 경악했고 일부 시민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시민들은 '가짜 뉴스'를 의심하기도 했고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을 토로했다. 5·18을 경험했던 지역민들은 다시 1980년의 망령이 되살아 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광주 시민 장원석(62)씨는 "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어이가 없다. 젊은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냥 웃을 일이 아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아들이 걱정된다. 젊은애들한테 말걸

“가짜 뉴스’ 인가 의심... ‘80년 망령’ 되살아난 듯’ 분노 “나라 살릴 생각 안하고 국민들 떨게 하는 대통령 탄핵”

일이 아니라 60대가 서울에 가서 직접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호소했다.

대리기사인 남성희(68)씨는 "경제 살릴 생각 안하고 국민들을 밀어붙이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라 살릴 생각 안하고 국민들 벌벌 떨게 만드는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5·18 당시 계엄령을 겪은 5·18 유공자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며 격앙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지금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과 화합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군부 독재정권처럼 계

엄령 선포한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민주주의가 충분히 잘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적 가치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5·18 정신이 바로세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경천동지할 일이다"면서 "스스로가 반국가 세력인데 다른 사람에게 반국가 세력이라고 떠넘기고 있는 꼴이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 오월대책위 집행위원장은 "1980년 5월 17일 밤이 떠오르는 것 같다"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

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5·18로 상처를 입은 광주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다"고 토로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할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막다른 골목에 놓인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통제력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전시나 사면도 아니고,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입장에서 비취볼 때 윤 정권의 비상사태인 것이지 국민들의 비상사태가 아니다"고 일침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도 "국민들이 무서워하기보다는 웃어버릴 것"이라면서 "다만 공권력을 동원할 힘이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윤석열의 만행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정책위원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면서 "자기 불안한 정치를 인식하고 자기 가족들의 범죄행위를 사실상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명백히 반헌법적 행위로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노동계는 각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 "40여년 전 아픔을 겪은 광주와 전남 시민들은 계엄령이 더 당황스럽고, 뼈저린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국정 농단을 해선 안된다. 불가 상송과 경기침체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하려 그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

지역 정치권 반응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담 넘어서 겨우 국회에 들어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냥 미친 짓"이라며 "어떤 국민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나라가 계엄령을 선포할 어떤 근거도 없는데 혼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진숙 의원 “계엄령 선포할 어떤 근거도 없다” 박군택 의원 “명백한 위헌... 이제 탄핵할 시간”

며 "모든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당하기를, 퇴진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은 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군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도 "경찰이 있을 때 겨우 길을 뚫고 들어왔는데 특전사가 도착한 뒤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 사면에 준하는 사태에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재는 '대통령이 기

분 나쁜 사태' 외에는 아무것도 헌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이 명백한, 사실상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본다"며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났다. 아들마저 동조하는 사태라면 윤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탄핵할 시간이다. 빨리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승만 9번·박정희 3번... 총 16회 발령

역대 계엄령

최초 계엄령은 '여순사건'

역대 대한민국의 계엄령은 이승만 정권에서 9번, 박정희 정권에서 3번 등 총 16번 발령됐다. 이중 비상계엄은 총 9차례 발령됐다.

이승만 정부가 1948년 여순항쟁시 여수·순천일대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이다. 같은해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부터 1951년까지 3번의 비상계엄과 2번의 경비계엄이 선포됐다.

1952년 부산 정치파동으로 비상계엄이 선포

됐다.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각 한차례씩 발령됐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 경비계엄도 발령했다. 1964년 6월 항쟁당시 박정희 정권은 서울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2년 10월 유신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내려졌고, 1979년 부마항쟁 당시에는 부산·경남에 비상계엄이 내려졌다.

1979년 10·26사건 이후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고 이후 전두환이 12·12 군사 반란 이후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촛불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선포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이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WP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하다”

외신 반응

AP·로이터 등 긴급 기사 타전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외신들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제히 '한국 대통령 계엄 선포' 제하의 기사를 긴급 기사로 타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은 야당의 행위로 정부가 마비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자유 민주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등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속보로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AP통신 역시 "윤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이번 조치가 한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중대 조치라고 선언했다"며 "이 조치가 국가의 거버넌스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야당을 극복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를 막으려는 복합의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고 보도했다.

WP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 후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전남도 긴급 회의

광주시와 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행정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등은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타 자치단체도 간부들을 비상 대기토록 하는 등 긴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 국민이 막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